

북핵 등 성과 값아먹는 일자리... 경제속도 조절론 대두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일자리 위원회·상황판 설치에도 3월 청년실업률 11.6% 악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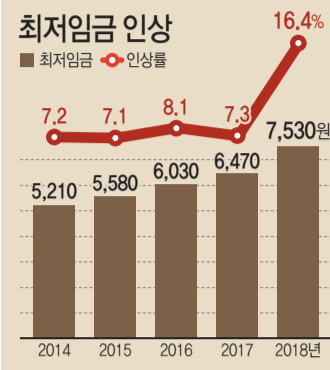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취임 당시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뜻대로 살아 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도 취임 초반부터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가운데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년간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의 데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이유이다.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3대 기본원칙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제 등 빛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지난해 취임 당일 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름 후에는 자신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

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예산·세제·정책금융·조달·인허가 우대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시 일자리배점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3월에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대책'도 별도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들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자리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각각 들른 것 역시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전체 실업률은 4.6%, 4.5%를 각각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의 4.9%(2월), 4.1%(3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8.7%(1월)→9.8%(2월)→11.6%(3월)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도 줄곧 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자도,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또 반대

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최근에 경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에도 19조2312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문제 만큼은 가뜩이나 갈길이 급한데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北·日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에 중요”

北, 평양-인천-제3국 국제항로 개설 추진

文 대통령, 日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진정으로 통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상처입은 피해자 용서·화해 필요”

9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으로 6년 반만에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한국과 한반도, 동북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현지에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지 유력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1874년 창간한 요미우리 신문은 아시아, 마이니치와 함께 일본 3대 신문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기준 조간 부수는 약 878만 부에 달한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불행한 역사로 고통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서면인터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면서 “공동선언에선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강화를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꼽았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

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일본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요청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에 꾸준히 제기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일 간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이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승호 기자

국제민항기구에 제안

북한이 우리 측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북측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FIR는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 업무를 제공키 위해 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으로 국가별 영토와 항행 지원 능력을 고려해 각국에 할당된다. /연철뉴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ICAO에 평양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개설을 요청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북한이 남북한 FIR를 잇는 제3국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국면이 전환돼 북한과 제3국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제3국을 오가는 최단거리 항로를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철뉴스

여야, 국회 정상화 공회전... 비공개 협상 진행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결렬 선언’을 하지는 않고 이날 중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됐느냐”는 물음엔 “추가로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철뉴스

일단 각 당 수석원내대표들이 만나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따로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날을 20대 전반기 국회 시한으로 거듭 규정하며 여야의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회동에서도 조속한 협상 타결은 물론 협상 불발 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의장은 오늘 중으로 타결이 안 되면 5월 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서로의 양보를 촉구했고, 국민의 참정권 훼손 문제 등이 있으니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라도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연철뉴스